

# 심사비용만 수천만원…‘LED 인증’ 겁나네

지역 업체들 KS인증 등 연기·포기 늘어

수수료도 기관별 제각각…지원대책 절실

광주에 본사를 둔 LED 조명제품 생산업체 A사는 최근 LED 조명제품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추진하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LED 조명제품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인증이 절실하지만 2천만원에 이르는 심사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워서다.

이 업체는 “고효율기자재 인증까지 받으려면 그만큼 추가 비용이 필요해 우선적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 LED 조명제조업체들이 비싼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KS 인증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업체가 생겨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LED 관련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열악한 지역 업체가 많다는 점에서 KS 인증제에

대한 중소업체들의 지원 방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LED 조명제품에 대한 KS 인증 시험기관 4곳(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조명기술연구원·전자파연구원·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심사 수수료가 턱없이 비싼데다, 항목별 수수료도 심사기관별로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현재 LED 조명제품의 KS 인증을 받으려면 50만원의 기본 신청비 외에

신청 업체별로 공장심사·제품심사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원의 제품 심사 수수료는 227만원이 반면, 한국조명기술연구원에서는 279만원을 내야 하며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도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는 299만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는 심사 수수료로 최고 40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인증 심사기관별로 23%~35%까지 차이가 나는 형편이다.

이 뿐만 아니라 KS 인증에 필요한 제조설비·검사설비 등 공장 심사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통상 1개 품목을 받는데 2명의 심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수당(1인당 하루 29만원)에 이들의 숙·식비, 교통비(5급 공무원 기준)도 업체 빼이다.

광주의 한 업체가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품목에 대한 KS 인증을 받으려면 대략 400만원이 넘어간다. 다양한 제품을 개발한 기업의 경우 인증 수수료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처음으로 인증을 추진하는 업체의 경우 표준화를 위한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지만 인증기관들은 장비 구입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과 KS 인증의 중복 항목이 많아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모두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의 인증 지원 및 기술 자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자금력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관별 수수료를 낮추는 한편, 지정 기관들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지자 기자 dok2000@kwangju.co.kr

인증을 추진중인 13개 업체의 공장심사까지의 평균 인증 수수료만 553만원에 달했다”면서 “심사기관별로 같은 인증이더라도 수수료가 23~35%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효율인증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8가지 LED 조명제품의 고효율기자재 인증 수수료도 기관별로 항목당 최저 100만원~411만원에 달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일각에서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과 KS 인증의 중복 항목이 많아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모두 경기도에 위치해 있어 광주·전남지역 업체들의 인증 지원 및 기술 자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자금력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관별 수수료를 낮추는 한편, 지정 기관들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지자 기자 dok2000@kwangju.co.kr

## 국내 첫 고효율 OLED 개발

〈유기 발광다이오드〉

생산기술연구원 호남본부 이종호 박사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기술지원본부가 국내 최초로 고효율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유기재료로 구성된 발광다이오드)를 개발해 화제다.

생기원 이종호 박사팀은 12일 “국내 최초로 1천cd/m<sup>2</sup>의 휙도에서 40lm/W, 3천cd/m<sup>2</sup>의 고휘도에서 35lm/W의 고효율을 나타내는 백색 OLED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cd(칸델라)는 빛의 진행방향에 수직한 면을 통과하는 빛의 양을 말하

며, lm(루멘)은 1cd의 균일한 광도의 광원으로부터 단위 입체각의 부분에 방출되는 광장을 말한다.

이번에 개발된 백색 OLED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 제품의 고효율 면에서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장시간 발광에도 폐열표면 온도가 50°C 이하로 매우 낮아 방열방각 모듈이 필요없는 저소비전력형 고효율 조명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원은 “인용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방에 82.5%가 물려 있으며, 85m<sup>2</sup>를 넘는 중대형 주택이 56.8%다.

특히 악성 미분양에 해당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의 36.1%로, 의한 위기 당시(17.6%)의 배를 웃돈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분양 주택이 지나치게 늘면 건설사 자금난과 고용 감소 등으로 하는 ‘단기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3일까지 입법에 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기사채 전자증권화는 사실상 기존 CP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CP의 위조 가능성을 방지하고 발행·유통상의 비용 절감, 신속한 자금조달, 단기증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의 이점이 있다. /연합뉴스

## “미분양 주택 34조 GDP 3% 넘어서”

### 삼성경제研 보고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 규모(분양가 기준)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12일 ‘현 주택시장의 부담 : 미분양의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8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3만3천779채로, 이는 지난해 GDP의 3.0~3.3%에 해당하는 31조~34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인용한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방에 82.5%가 물려 있으며, 85m<sup>2</sup>를 넘는 중대형 주택이 56.8%다.

특히 악성 미분양에 해당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의 36.1%로, 의한 위기 당시(17.6%)의 배를 웃돈다고 박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미분양 주택이 지나치게 늘면 건설사 자금난과 고용 감소 등으

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도 반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데, 인위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5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우선 “미분양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해당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미분양 대책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택 수요자들의 ‘교섭력’을 높이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사업계획을 바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건설업체가 자구노력을 할 경우 보금자리 주택과 기업 공동주택 건설, 임대 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주택수요 확충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개발하거나 유판 1기 신고 때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 분부터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반지 등 고금(古金) 거래 시에도 매입자가 부가세를 내게 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탈세 목적

으로 하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

는 ‘자료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조사국에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관내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허위계산서를 구매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탈세 목적으로 하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

‘미소금융’ 출연금 윤곽

삼성 3천억·SK 2천억

주요 대기업들의 미소(美少)금융 출연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주요 그룹은 별도의 미소금융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삼성그룹이 3천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그룹은 2천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른 그룹들의 분담액도 금방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조성될 2조원 규모의 미소금융중장재단 대출 재원 가운데 절반인 1조원은 대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원은 금융권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주요 그룹들은 개별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르면 13일 미소금융중장재단과 재단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리츠 수익률 ‘대박’

연평균 8.3% 배당

부동산펀드의 2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수익률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2년 첫 리츠회사가 설립된 후 1회 이상 배당을 한 리츠(청산분 포함)는 총 21개로 이들 회사의 연평균 배당률은 8.34%로 조사됐다.

이는 펀드평가회사 제로인이 집계한 현재 연평균 수익률(3.18%)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 코스피지수 1,639.81 (-6.98)  
▶ 코스닥지수 510.21 (+3.92)  
▶ 금리 (국고채 3년) 4.39% (+0.03)  
▶ 원·달러 환율 1,170.00원 (+5.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12일 서울 을지로3가 더조은 인쇄에서 중의 제약 직원과 인쇄소 직원이 2010년 경인년 새해 달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세요”

광주지방국세청, 2분기 대상자 9만4천명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제2

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 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4만5천명, 개인사업자는 4만9천명 등 9만4천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매출·매입 실적이 신고 대상이다.

신규 개업했거나 유판 1기 신고 때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로부터 금괴인 금지금(金地金)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반지 등 고금(古金) 거래 시에도 매입자가 부가세를 내게 된다.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탈세 목적으로 하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

는 ‘자료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하고 조사국에 거래질서분석전담반과 관내 세무서의 세원정보팀을 통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허위계산서를 구매해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는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활동을 계속 하기로 했다.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법정기한보다 8일 앞당겨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탈세 목적으로 하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

### 광주 전지역 빌딩 전문

#### 빌딩(대형)임대 및 매매

#### 광주 전지역, 상업지개발 상담 전문

(매매 및 개발이 어려운 토지)

※ 상무지구 빌딩매매 ※

- 대지 : 150평 - 건물 : 884평

- 매도가 : 49억

보증금 : 5억 3,000만원 / 월세 : 3,730만원

광주은행 뒤 (지하 1층, 지상 7층)

사/원/모/집

남·여 0명 (\* 20대 후반~30대 초반)

기본금+성과급